

새해 달라지는 산업정책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1	무역업	무역업신고제	무역업고유번호제 수출실적확인 등 통계관리 목적	대외무역 관리 규정 2000. 1. 1	무역정책과 500-2365
2	원산지표시	제조단계에서 표시되 는 모든 방법 허용	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원칙적으로 허용하 고 유통과정에서 훼손가능 성이 있는 라벨, 스티커 등 의 방법은 예외적으로 허용	대외무역 관리 규정 2000. 7. 1	무역정책과 500-2365
3	남북거래	신설	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 적으로 인정하고 무역금융 융자 대상실적에 포함	대외무역 관리 규정 2000. 1.1.	무역정책과 500-2365
4	수출보험	9개 보험 종목 운영	종전 9개 보험종목외에 이 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원자재, 수입신용 보증 도입	수출보험법 2000. 1. 1	수출과 500-2375
5	기업구조조정 조합등록	산업자원부가 기업구 조조정전문회사와 기 업구조조정조합을 등록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관련한 등록, 감독 및 취소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짐	산업발전법 2000. 3 예정	산업정책과 500-2421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산업기술정보원 및 중 소기업진흥공단 등 기 술관련기관에서 기관 자체적으로 미온적인 기술이전·거래업무 수행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민간 상호간의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기술거래소 설립근거 마련 등	'기술이전 촉진 법' 제정 예정	산업기술정책과 500-2563
			'한국기술거래소' 설립 기술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평가·거래되고 기술을 신 용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여 건마련 등	'기술이전 촉진 법' 제정 예정	산업기술개발과 500-246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명 전화번호
7	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를 안전인증제도 로 전환	1종 전기용품에 대하 여 형식구분별로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 쳐 기술표준원에서 형 식승인을 받도록 함 (신청자 : 국내외 형식 승인 대상 전기용품 제 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의 모델별로 안 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신청자 : 국내외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000. 7. 1	품질디자인과 500-2528
		형식승인 받은 전기용 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 토록 함	안전인증 받은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마크를 부 착하여 판매토록 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000. 7. 1	품질디자인과 500-2528
		불법·불량 전기용품 에 대하여 파기·수거 명령만 가능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 하여 파기·수거명령을 이 행하지 않을 시 정부가 직 접 파기·수거하거나 해당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언론공표·리콜명령 추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000. 7. 1	품질디자인과 500-2528
8	염의 품질검사 완화	염의 품질검사를 영업 조합에서만 검사	염의 품질검사기관의 복수 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년 상반기	화학생물산업과 500-2545
9	석유품질검사 체제 개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만 검사 시행	복수의 품질검사지정기관이 검사시행 및 정유사 자체검 사 가능	석유사업법 제 25조 및 25조 의 2 2000. 7	석유산업과 500-2704

▲ 2000년 주요 정책자금 현황

자 금 명	사업규모 (억원)	대출금리 (%)	한 도 (억원)	상환기간 (거치기간, 년)	지 원 대 상
· 구조개선자금	7,000	8.25	20	8(3)	업종별 부채비율의 2배 이내
· 경영안정자금	3,200				
- 일반자금	2,800	8.25	5	5(2)	수출·벤처·기술력 우수기업
- 특별자금	400	9이내	5	3(1)	부도위기 직면 기업

자 금 명	사업규모 (억원)	대출금리 (%)	한 도 (억원)	상환기간 (거치기간, 년)	지 원 대 상
·중소·벤처자금					
- 창업자금	2,000	8.25	5	5(2)	업력 3년 이내
- 벤처투자자금(KVF)	1,000	-	-	-	벤처기업
- 국민벤처펀드	217	-	-	-	3년미만의 초기벤처기업
- 투자조합 출자	2,500	-	-	-	벤처기업 투자조합
·개업개선펀드	500	-	-	-	일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구조조정조합)	300	-	-	-	부도, 워크아웃기업
·협동화자금	2,700	-	-	-	
- 시설자금		8.25	30~50	8~10	3개 기업이상의 공동사업
- 운전자금		8.25	5~10	3~5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500	-	-	-	
- 시설자금	-	8.25	7	10	농공단지 입주기업
- 운전자금	-	8.25	3	4	
·개발기술사업화	300	7.25	5	5(2)	기술개발 성공과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제정분)	3,662	8.25	8, 3	시설8(3), 운전 3(1)	업종별 부채비율 2배 이내
·소상공인지원자금	2,000	8.0	0.5	3(1)	소규모 영세기업 10인 이하 제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600	보조금	1	30% 이내 원금 5년 상환	1년 이내 개발완료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25	보조금	개발비 75%지원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기업

(제공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김영호 산자부 장관 취임

산업자원부 신임 장관으로 김영호(金泳鎬, 60) 경북대 교수(경제학)가 지난 14일 취임했다.

금장관은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통해 “35년간 대학에서 한국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를 연구해 왔고 이제는 실천하는 입장에 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정보기술혁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기술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심화·확대하는 국면에 접어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내에서 그들과 부당,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며 경쟁력 강화 작업에 매진해 한국의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직원들도 이러한 심증을 이해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하던 김장관의 이번 입각은 평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사심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대통령도 이를 세심히 경청, 김장관의 학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 창출과 개혁성향을 높이 평

가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적 안배도 적지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세계 20여개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한 김장관은 일본 오사카시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대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일본통으로 산업기술정책심의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을 맡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98년에는 제2전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현 정부와 정치적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중소개발보유기술사업화 지원실시

중소기업이 개발해 보유중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여건의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를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 한해에는 우선 3백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총 2백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에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최근 3년 이내 중기청에서 실시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자원부 '특허사업화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진단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초기 제품유통 생산비용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또 개발기술이 단기간에 업체의 매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기술에 기초한 대규모 시설투자 이전에 소비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 조건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리(7.25%) 수준으로 시증금리에 연동하고 2년거치 5년에 자금수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3억원)의 한도에서 담보나 보증여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순수 신용으로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상당수 중소기업이 개발기술 사

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개발 결과를 사장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및 양산에 이르는 일괄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 기업의 확대를 추진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잉생산설비 폐기처분시 세액공제

기업이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 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신설하고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등 총 17개 업종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잉생산 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기업들은 폐기자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생산설비 폐기처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99년 6월 12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 수혜대상 기업의 폭을 넓혔다.

산자부는 대상업종의 선정에 대해 최근 3년여 동안 부조업체수 및 유타설비 발생현황을 감안한 업종, 대규모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부품 소재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의 기준을 적용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자집적회로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제조업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컴퓨터제조업 등 총 17개 업종을 선정했다.

과잉설비폐기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폐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폐기사유 폐기설비의 명칭 폐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명칭 폐기일 폐기설비의 자산가액 폐기방법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기처분의 방법으로는 철거된 과잉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했거나 철거해 보관하고 있는 등의 방법이 모두 해당된다.

산자부 일부 직제 개편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상거래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의 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는 현재 에너지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업무를 자원정책과로 이관하고 에너지관리과와 에너지기술과를 자원기술과로 통합했다.

또 자원정책심의관 산하의 석탄산업과는 에너지산업심의관 소관으로, 에너지산업심의관 소관인 에너지안전과는 자원정책심의관 소관으로 맞바꾸었다.

산자부는 이와 같이 에너지 분야의 일부 업무조정과 함께 전자상거래 지원부서인 전자상거래과, 벤처·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담당할 무역진흥과, 기계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담당할 자본재산업총괄과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2000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자원정책실의 과조직은 자원

정책심의관 산하에 자원정책과 지원기술과 자원개발과 에너지안전과 등 4개 과 조직, 에너지산업심의관 산하에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 원자력산업과 석탄산업과 등 5개과 체제로 개편됐다.

또 산자부는 신설된 전자상거래과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촉진,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국제규범 논의의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겼고 국제협력심의관실 소관의 국제협력, 미주협력, 아주협력, 구아협력 등 지역별 편제로 이뤄진 과 조직을 산업협력과, 국제협력과, 지역협력과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번 산자부 조직개편은 총 정원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과를 신설하고 일부 과 단위의 업무를 통합, 재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류기, 가스개폐기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제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올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에서 정류기와 가스개폐기가 제외됐다.

이로써 전기조합은 지난해 6개였던 단체수의계약 적용품목이 올해 4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물품지정에서 제외된 정류기, 가스개폐기 외에 단체수의계약 적용품목으로 남게 된 물품은 변압기를 비롯해 수배전반,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4개 품목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에서 전기조합에 3개 품목 이상을 제외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들 품목이 전업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외에 아직도 중소기업으로서 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 2개 품목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 중에서 정류기는 일찌감치 결정이 됐으나 나머지 한 개 품목은 끝까지 향방이 결정되지 못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초조하게 했다.

가스개폐기,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등 3개 품목이 제외 대상품목으로 강하게 부상했는데 전업율적인 측면이나 기업의 규모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가스개폐기가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제외됐거나 제외대상품목으로 떠올랐던 품목 외에 변압기와 수배전반도 단체수의계약 운용상의 문제점이 거론돼 상당한 논란이 야기됐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있어서의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을 즉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올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206개 품목에서 52개 품목이 축소되어 154개

품목만이 남게 됐으며, 내년에는 이 중에서 또 51개 품목이 축소되어 103개 품목만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에서 제외된 전기공업 관련 물품은 정류기, 가스개폐기 외에 네온사인, 강관전주, 전화선, 유무선원격제어기, 무선통신틀배분기, 폐기물소각로 등이다.

32개 품목에 할당관세

산업자원부는 변압기 철심용의 비정질 합금강 박막 1,000MT과 조명기구제조용 알루미늄 반사판 500MT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수입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수량을 추천 받기로 했다.

또 핫코일 동광 고철 알루미늄선 등 기초원자재 17개 품목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 포인트 낮은 할당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율 적용 32개 품목을 고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적용품목은 ▲핫코일 ▲고철 ▲철

또는 비합금강 슬랩 ▲비합금 선철 ▲펄프 ▲반도체 제조용 석용유리 ▲마그네슘 잉곳 ▲슬랩 등 8개 품목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기공업진흥회는 변압기 철심용 비합금강의 반제품 1,000MT을, 전등기구조합은 반사판용 알루미늄의 판·시트 500MT을 각각 수입추천하는 등 모두 15개 수입추천 품목은 제한된 수입수량에 한해 할당관세율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수입수량에 제한이 없는 천연인산칼슘, 염화칼륨, 연광, 이연광, 고철, 알루미늄스크랩 등 6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면사, 반합성필라멘트사 등 나머지 품목은 0.5~6%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 中企제품 1분기 조기구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1분기에 조기 집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를위해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늦어도 2월중으로 확정하고 1분기에 연간

구매물량의 약 30% 이상 조기구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계획 29조7천억원중 1분기에 9조4천억원(31.6%) 조기구매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하고 있다.

1분기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의 통상 비수기로 인식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구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지난해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3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 -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평가 실시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협력체제 평가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완화하고 어음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섬유 6개 업종의 200개 제조업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유통, 건설업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평가내용(100점 만점)은 크게 하도급거래실태(65점)와 중소기업지원실적(35점)으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실태의 경우 가장 문제시되는 현금거래비중(40점)과 어음결제기간(15점)에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장당어음발행금액(5점) 납품대금 카드결제제도 도입여부(5점)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단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협력지원체계(10점), 기술협력(15점), 연계보증(5점), 우수협력사례(5점) 등을 고루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업종침해(-10점)와 사업영역보호법 등 하도급관련 법률위반(-30점)에 대해서는 감점기준을 강화했다.

중기청은 협력평가 결과 상위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주간행사시 대·중소기업 협력부분 대상업체로 선정 포상기로 하는 한편, 공공기관 조달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협력 대기업을 위한 별도의 포상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 부족한 中企에 1100명 파견 지원

실직한 고급기술자를 중소기업 현장에 연계 지원

하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이 올해도 지속

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2000년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46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700여개 중소기업에 1100명을 고급기술자를 파견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예산 집행완료시까지 중소기업 및 실직 기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5명까지 4~6개월간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주요 10개국에 대한 기술장벽 돌파방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주덕영)에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UL·유럽연합(EU)의 CE마킹 제도 등 주요 수출대상 10개국의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조사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번 홈페이지의 특징은 현지 유관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 및 KOTRA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하여 장기간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제작한 것으로 기술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제품인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홈페이지 개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인증 대상품목, 시험검사 및 인증업무 수행 주관기관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둘째, 제품인증 절차, 불합격시의 처리내용, 인증획득시의 비용 및 소요기간을 기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셋째, 제품인증시 외국업체의 차별대우 여부 및 우리업체의 유의사항등을 소개하였음.

※ 홈페이지 : <http://www.ats.go.kr>
(지원정보 클릭)

기술표준원은 이번 수출품에 대한 기술장벽 돌파방안 안내 뿐만 아니라 KOLAS(한국시험인증기구), 공산품 안전기준, IAF(국제인증포럼)등 관련 국제기구 등과 연계시켜 외국의 강제인증에 관련된 모든 의문사항을 해결토록 Q/A(Question and Answer)방을 포함한 종합인터넷망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홈페이지 개설과 아울러 「2000년에 대비한 알기쉬운 외국의 강제인증제도」 안내서 300부를 제작하여 관련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람.

참고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전시나 판매를 금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의 하나인 사실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수출시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상무부와 EU 집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수출규모는 총수출의 1/4에 달하고 수출감소 효과를 15%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전기용품 제조·수입업체 13% 부적합 판정받아

전기용품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962개 가운데 13.2%에 해당되는 127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형식승인이 취소되는 등 적법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혹은 수입 판매하는 962개 업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안전성 및 애프터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3.2%인 127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수입이 급증되거나 과당 경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전기믹서기 등 8개 품목 중 시중에 유통되는 134개 업체 제품들을 수거, 시험한 결과 약 40.2%인 54개 업체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28개 수입판매업체 가운데 8.8%인 73개 업체가 애프터서비스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스단자 미부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과다한 열로 화재 우려가 있는 대원정밀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이 취소됐다. 또 전자파 발생으로 다른 전기용품 작동을 방해하거나 전류 차단기능이 떨어지는 서통전자, (주)필립스전자, 등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표준원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해 향후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부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벗어나도 세제 혜택 유예기간 3년으로 늘려

이번 달 안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매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1천여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

을 우려해 규모확대를 기피해 왔던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설비투자확대 및 고용증대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으로 매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1천여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중소기업 인정기간 동안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특별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증권 100% 담보인정

조만간 수출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이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돼 수출업체들의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곧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에서 발행한 수출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원활한 수출금융지원 기반이 확충된다. 수출업체들은 담보 및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돼 올해 수출에 한걸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을 다지고 올해 무역수지 전망이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비춰 수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로 수출지원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간의 공조가 가능하게 돼 수출업체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보험공사측에서는 담보력이 강화돼 수출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증권의 위상이 강화될

으로써 보다 원활한 수출지원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은 작년 8월 수출업체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하는데 이어 5개월만에 다시 이를 상향조정했다.

작년 3월이전만 해도 수출보험증권은 보완담보로만 인정됐다. 3월이후 정규담보로 인정되면서 담보효력 부족분을 계산해 70%로 담보인정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작년 정규담보를 수출보험증권을 인정한 이래 수출업체들은 담보부담이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내부적으로 1월중에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며 다만 올해중에 100%로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한 바는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다른 국내 금융기관(은행)에서는 중장기 연불금융 취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출보험 담보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국계은행은 중장기 수출보험증권에 대해 담보효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기업 지방이전 혜택 확대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인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인센티

브 지원 방안등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또 이전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이전기업 및 지자체의 애로요인을 파악,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방이전촉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기획단'을 청와대에 설치,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천명한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업유치노력을 전개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방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애로요인을 수시로 파악, 필요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를 상정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의 제·개정, 관련사업의 예산안 등이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국내기업 촉진지구를 만들 것을 비취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지원면에서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고 기존공장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중이다. 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조례개정지침은 전남·경남 등 일

부에서 이미 완료했고 여타 시군구도 5~6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이전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출자분 1천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지방이전기업 대출금의 50%를 산은이 저리로 지원하고 산은 자체자금 7천억원을 활용, 지방이전기업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업기반자금 운용요령'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용요령'을 1월중 개정·시달해 금융상 애로를 완화키로 했다.

배후도시개발을 위해 개별기업이나 여러기업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전종업원수가 1천명을 넘으면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국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기업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해 건설교통부·토지공사·산은으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20일부터 건교부내에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관계부처 인원을 보강키로 했다.

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체계는 갖춰진만큼 각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같은 심정으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유도하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